

우명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실증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전버들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실증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우명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전버들

인 준 서

전버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정부의 재정운영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외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조세·재정제도 자체에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정이 어느 정도 경기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직·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상황 또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경제가 불황이면 정부는 세율 인하, 조세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거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물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을 '재량적 조세·재정정책'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및 OECD국가를 중심으로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최근 10년간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는지 실증 분석한다. 종속변수, 즉 재정의 경기대응지표는 GDP대비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의 비율이었으며, 우리나라 및 OECD국가 표본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2

제 2 장 이론적 연구

제 1 절 경기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4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4
2.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위상	10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제 3 장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실증 분석

제 1 절 OECD국가의 재정운영과 재정수지 변화추세	30
제 2 절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실증 분석	33
1. 표본의 선정	34
2. 변수의 정의 및 연구모형	34
3. 변수의 기술 통계	37
4. 분석결과	38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구조모형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결과	22
<표 2> SVAR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승수 추정결과	24
<표 3> SVAR모형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국내연구 요약	25
<표 4> 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연구 요약	29
<표 5> (식 1)의 각 변수 설명	35
<표 6>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37
<표 7> 1차차분 재정수지와 변수간 상관분석	38
<표 8> 1차차분 조세수입과 변수간 상관분석	39
<표 9> 1차차분 정부지출과 변수간 상관분석	40
<표 10-1> 재정수지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1
<표 10-2> 재정수지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2
<표 11-1> 재정수입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3
<표 11-2> 재정수입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4
<표 12-1> 재정지출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5
<표 12-2> 재정지출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46

그림 목 차

<그림 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	31
<그림 2> 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31
<그림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32
<그림 4> OECD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3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이 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 안정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경제체제에 의하여 대부분 수행되지만 공공재의 공급 등은 시장경제의 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인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자원 배분을 개입하여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 간의 소득 분배까지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재정, 금융, 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며, 재정은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운영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외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내경제와 해외경제 간의 연계성이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에서는 해외여건의 급변동이 국내경제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하여 경기의 변동 폭을 확대시키게 되므로 재정의 경기안정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진다.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조세·재정제도 자체에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정이 어느 정도 경기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직·간접적으로 경기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상황 또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경제가 불황이면 정부는 세율 인하, 조세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거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물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을 '재량적 조세·재정정책'이라고 한다.

한편 이렇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재정 측면에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조세·재정제도 자체에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경기불황기에는 근로소득, 법인소득,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등 세원이 줄어들거나 누진적인 세율구조로 인해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실업급여의 지급 등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반대로 경기호황기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이를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라고 부른다.

이러한 재정의 재량적 정책 및 자동 안정화 장치는 모두 민간의 가치분소득, 국민경제의 총수요 등의 변동을 초래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재량적 정책 및 자동안정화 장치는 모두 조세수입 및 재정지출의 변동을 통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다.¹⁾

1) 박형수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pp39~41 『재정포럼』 2002년 10월호

제 2 절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줄이는데 실제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경기역행적이나 경기순행적이라는 용어는 단어 그대로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기대응적이라는 표현은 재정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정흑자와 세수가 경기순행적으로, 재정지출이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는지를 1994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최근 10년 동안 OECD국가를 대상으로 검정해 보고자 한다. GDP대비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의 비율을 재정의 경기대응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추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1 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연구로써 재정의 기능 및 경기안정화의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대한 내용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선정 및 변수의 정의와,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등,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으로 각 변수의 기술통계 및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제 4 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결과 요약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기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현대의 경제사회는 대부분 혼합경제(mixed economy)이다. 혼합경제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이 병존하는 상태를 말하지만,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가 병존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은 희소한 자원을 시장기구를 통하여 배분하지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이와 같은 비시장형경제의 전형이다. 즉, 공공부문은 강제로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독자적인 규칙에 의해서 지출하여 배분함과 동시에 이와는 상이한 시장원리가 존재하는 곳이다.

비시장형경제는 정부가 아닌 경제주체에도 존재한다. 가족의 경우 그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의해서 가족들간의 수입과 지출을 배분한다. 대기업도 시장경제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내부거래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기도 한다. 또 종교단체의 자선행위와 같이 비시장형 경제의 존재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비시장형 경제활동 가운데 정부의 활동은 규모나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정의 기능을 알아 보기 전에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오직 시장경제만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를 가정해 보자. 여기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고, 공평한 소득분배와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렇게 이상적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사회에 공공부문이 필요한가? 이 경우 공공부문이 필요하다면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도 분명해질 것이다.

민간부문이 시장기구 안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

공부문은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경제주체가 자발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위한 게임의 규칙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게임의 규칙은 관습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규칙을 지키고 또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공부문(정부)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불가피한 계약에 의한 규칙이나 사유재산의 유지에 관해서는 민법 · 상법 등과 같은 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부의 불가피한 역할이 된다. 제도 속에 사는 우리는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원활한 시장기구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시장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시장기구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미스(A. Smith)로 대표되는 고전학과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중요시한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고전학과도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 사법 · 경찰의 활동이나 사회의 존속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비도 이와 같은 역할에 포함된다고 보아도 좋다.

프리드만의 경우는 정부활동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카고 학파의 중심인 프리드만은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은 될 수 있는 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학과적인 정부에 대한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프리드만은 규칙의 설정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이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한다. 즉, '건전한 사회의 요건은 그 구성원이 그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조건과 이 조건의 상반된 해석을 조정하는 수단,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일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일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규칙의 설정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의 존재근거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철학적인 요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리드만과 같이 경제적 효율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것과는 달리 하이에크(F.Hayek)는 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창조적 활동력을 발휘하려면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또는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제되지 않는 영역을 확실히 보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필요하게 된다. 만일 사적인 주체가 이와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면 자의적 강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의적 강제를 피하는 데는 정부가 일반원칙(general rule of law)을 마련하여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가 사유재산권이며, 이 권리로 해서 타인으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영역이 설정된다고 한다. 하이에크는 이른바 자의적이지 않은 예측가능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정부(또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정부활동은 자의적인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프리드만과 같이 정부활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정부가 해약을 주는 것은 정부가 자의적인 시장개입을 할 때이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이름으로 자의적인 강제를 휘두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자.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는 시장경제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환경오염 혹은 공해 등은 시장기구 안에서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만들므로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나 공해세 등을 통하여 통제할 필요(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가 시장경제의 움직임에만 의존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정도로 일어난다면 공공부문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때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공평하다는 보장도 없

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부를 재분배할 필요가 생기며, 이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선진국경제에서도 고전학파적인 정부존재이유 또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자의 정부존재이유를 넘어서 시장경제가 갖는 기능장애(시장실패)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시장개입이 일어나고 있다.²⁾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은 다양한 만큼 정부의 기능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대체로 정부의 기능은 크게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경제체제에 의하여 대부분 수행되지만 공공재의 공급 등은 시장경제의 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인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자원 배분을 개입하여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 간의 소득 분배까지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재정, 금융, 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을 통하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며, 재정은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런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재는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민간 부문에 의하여 공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하여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서비스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공공재는 국내의 생산 활동이나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하부 구조로서 작용하며,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 편익 · 손실은 시장 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민간 생산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더 적

2) 최성수, 『재정학』, 대왕사 1997.

게 생산하거나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등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등 직접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그 재화의 공급을 늘리려 한다. 반대로 외부 불경제가 있는 공해 산업에 대하여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으로 산출량을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 공급량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재화의 공급이 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행해졌다고 해도,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까지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소득 분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남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만큼 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경제가 성장하여 가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되면 실업자나 빈곤 계층에 의한 범죄 등 부정적인 사회적 외부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소득 재분배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세입 면에 있어서 소득세, 상속세, 종여세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저소득자의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하고 있다. 세출 면에서는 생활 보호 등의 이전적 지출, 의무 교육에 대한 지원, 저소득 계층의 주택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자에게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고소득자에게는 그 반대로 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국민경제의 총수요는 가계의 소비 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지출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를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수요의 크기는 상당한 진폭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단에는

재정 이외에도 금융, 외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단간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조합이라고 부른다. 우리 경제가 개방화 되면서 금융, 외환정책은 국제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의 폭이 점점 더 제약되게 되며, 따라서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활용한다.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수를 줄여 민간 수요를 크게 하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할 수 있다. 총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에 의해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우리의 경우 1998년에 1983년 이후 15년만에 적자재정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과다할 때에는 이를 억제해 주고, 부족할 때에는 보충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를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매우 복잡하며 모든 나라가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호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기능은 중요하다.

2. 경기조절수단으로서의 재정의 위상

재정당국은 세율이나 재정지출수준 등 재정수단을 변경시켜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자동안정장치, 정칙적 신축성, 그리고 자유재량적 재정정책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자동안정장치는 '예산의 구조적 신축성'이라고도 한다. 이 장치는 현대국가의 누진적 조세제도와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지출제도 등의 재정제도가 국민소득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수나 지출을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가처분소득 변화폭을 상대적으로 좁게 함으로써 소비지출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즉, 경기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인 재정수단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상승하면 자동안정장치에 의하여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는 장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누진소득세제하에서 경기상승(호황)기에는 소득이 늘어난 비율보다 세율이 더 크게 늘어나고, 이렇게 조세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므로 가처분소득 내지 소비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낮게 되어 가열된 경기팽창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게 된다. 한편 경기하강(불황)기에는 소득이 줄어든 비율보다 세율은 더 크게 줄어들며 조세감소율이 소득감소율을 앞지르므로, 가처분소득 내지 소비감소율이 국민 소득감소율보다 낮게 되어 위축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부추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자동안정장치의 효과는 소극적이며, 그 크기가 매우 미약하다. 즉, 총수요에 대한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불황에 직면하여 감세나 공공투자 증대와 같은 민간의 불안정한 작용을 상쇄하는 힘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동안정장치는 안정능력이 미약하다. 또한 자동안정장치는 안정추구를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일 수 있다. 즉, 자동안정장치의 중심개념인 누진소득세율 구조를 볼 때 경기회복기에 증대된 소득의 일부가 세수로 흡수되어 가처분 소

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상승추세를 도리어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상승기에 높은 누진세율구조 때문에 기업가의 투자욕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동안정장치로 인해 조세증가가 지출증가를 능가함으로써(세수의 자동적 증가), 경제에 대한 하향압력과 실업증가의 압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재정장애(fiscal drag)'라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은 위축되는 것이다.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로, 재정당국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재량에 의해 임의로) 세율이나 재정지출수준 등 그 통제하에 있는 재정수단을 변경시켜 경제안정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조절 정책인 재량적 재정정책이 있다. 즉, 경기가 불황이면 (승수효과를 고려해서) 정부지출의 증가나 조세감면 등의 팽창정책에 의하여 경기를 확장시키고,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지출의 감축이나 세율인상에 의한 긴축정책을 직접적으로 펴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재량적 재정정책수단은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다른 안정정책에 비하여 한층 더 능동적이고 강력한 안정정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시차문제로서, 먼저 경제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태발생으로부터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생기는 인식시차(recognition lag)가 있으며, 다음으로 정책당국이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채택하고 실시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생기는 실행시차(implementation lag)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책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부터 생기는 집행시차(action lag)가 있다. 이 세 가지 시차가 어우러져 정책효과는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둘째, 자유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한 총수요억제로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에는 효력을 발생 시킬 수 있으나, 비용상승 등 생산면의 애로, 시장구조문제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방지에는 효력이 없다. 또한 총수요조절을 위한 공공투자가 수요창출효과보다 더 큰 공급능력을 가져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를 팽창시키는 경우는 정치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기를 억제할 때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이용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민주주의하에서 정부재정수지를 통한 경기보정은 사실상 비대칭성을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큰 정부(big government)'로 나가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재정의 기능은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 즉 방법론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체적인 견해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근대경제학적 논자들 중에서 이른바 자유주의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재정이론은 고전파, 신고전파의 '작은 정부론', '중립적 재정론' 내지는 '균형재정론', 통화주의자와 공공선택이론의 '새로운 의미의 작은 정부론' 또는 '신균형재정론' 등이다. 이들 이론에서는 공채가 부정되며, 조세는 중립적 조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정부의 역할을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 국한시키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최저한의 자원배분조정기능은 받아들이고 있으나,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성장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이다. 국가가 최저한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정책적으로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준칙(규칙, guide line or rule)을 설정하여 각자 자기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경제활동에서 개별구성원의 사적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기본틀 형성기능 (framework-setting function)'이라고도 한다.³⁾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 이들은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그 보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은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그리고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 역시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

3) T.Caslin(1987), p.26

면, 외부성 부분에 대해 시장을 개설하자든가 또는 보다 정교하게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에 자발적인 교환을 유도해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많은 논자는 시장실패의 원인을 '재산권의 부적절한 배분'에 있다고 보고, 국가개입 대신에 재산권을 보다 잘 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가 '코스정리(Coase theorem)⁴⁾이다. 또 하나의 예로 이들은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규모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解)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른바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 이처럼 이들은 정부개입은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의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국가는 재산권을 규정짓고 시행하는 일, 경쟁시장을 유지하는 일,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 방위조직을 운영하는 일 등에 그 활동영역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이용에 대한 적절한 계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특정 서비스의 공급은 결국 불필요한 지출을 불러와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민간기업의 자유의 폭을 확대시키고,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가 활동의 민영화를 주장한다.

이른바 '신우파'는 초기자유주의자보다 더 작은 국가를 선호하여 국방, 법적 틀의 제공과 같은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국가를 선호한다. 심지어 하이에크 같은 이는 국가 활동의 팽창은 '노예로 향하는 길(The road to serfdom)'이라는 견해를 개진하기까지 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희생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권리를 갖지 못하며, 국가나 정부도 마땅히 그러한

4) 이 정리는 시장이 시장실패를 시정할 수 있는 우월한 기구라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들 자유주의자는 정부의 간섭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는 바람직한 분배상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의 결실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고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지출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복지정책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은 독점 등 불완전경제 시장을 통해 얻은 성과분배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더 기본적으로는 시장기구나 그에 준하는 작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세-이전지출수단에 의한 직접적 ·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에 민간의 보험원리를 도입한 상호부조의 사회 보험식 사회보장이나 일정한 제도를 마련해서 사적 유인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분배 수단을 권고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로 프리드먼 등의 '부(負)의 소득세제도'를 들 수 있는바, 이 제도는 기존의 이전지출제도가 갖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 · 구체적인 개입의 폭을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갖는 노동에 대한 부의 유인을 줄여 효율성도 제고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된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일정 소득수준(빈곤선) 이하의 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편익을 급부하는 이전지출제도가 근로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빈곤선 이하의 소득자에게도 그 이상의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정(正)의 누진소득과세와 유사하게 부의 소득세율을 정하여, 빈곤선에 이르지 못한 모든 개인에게 최저소득수준(빈곤선)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각각의 소득수준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모자라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전지출을 지급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지출 수급 후의 소득수준에 차등이 생기게 해 줌으로써 덜 가난해지려는 근로유인을 고취시키려는 방안이다.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새고전학파, 나아가 공공선택

이론가는 재정의 안정화기능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먼저 고전학파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주요 경제변수가 상하방 완전신축적으로 작동하여 경제는 항상 완전고용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러한 입장에서 재정도 균형재정이 주축을 이루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경우는 경제안정을 위해 특별히 재정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재정적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적자재정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곧바로 감채기금제도 등 균형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그 후 통화주의자와 합리적 기대형성론자 등 이른바 신우파도 자유방임경제가 노동과 자본의 완전고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민간기업경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완전고용(흔히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시키는 길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들도 시장의 작용에 대한 국가개입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롭다고 보았다. 즉,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오히려 오직(汚職) · 부패 등의 '정부실패'를 초래함으로써 지속적인 경비팽창이 일어나 만성적인 재정적자상태에 직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논자들은 완전고용을 위해 정부가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규칙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먼과 같은 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준칙(guide line)에 따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정부가 화폐금융제도를 운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뷰캐넌을 중심으로 한 공공선택이론가는 재정면에서 반(反)케인스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적자재정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뷰캐넌 등 공공선택이론가는 먼저 공공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 의회 등이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케인즈적 가정 대신에 인간은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적 행위를 할 때나 모두 사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

정을 바꾼다. 이렇게 가정을 바꿈으로써 이들은 케인스의 정책이 민주적인 정치체도와 결합되면서 경기를 팽창시키는 경우는 정치적으로 용이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경기를 억제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기보정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비대칭성을 보임으로써 국가는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고지출은 계속 확대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⁵⁾ 재정정책으로 적자재정이 용인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이 마비되고, 복지혜택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율을 저해시키고,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부 경비팽창의 주원인을 공공선택행위에서의 개인주의적 관점에 있다고 보는 뷰캐넌류의 공공선택이론가는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준칙(헌법상의 균형예산 규정)을 설정해서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근대경제학자 중에서 개혁주의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재정이론의 기본들은 케인스, 나아가 신고전파종합의 '적자재정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공채가 긍정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이 장려되며, 조세는 'fiscal policy'의 수단으로 시장실패의 보정수단으로서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란 측면에서 이들은 정부가 자원의 최적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성장역할을 모두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입장에서는 국가가 재정 · 금융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를 계획 · 관리함으로써 국가에 요구되는 광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가 경제관리자적 입장에서 민간경제의 작용에 대해 각종 규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는 개혁자주의자들도 개별경제주체가 갖는 선택의 자유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시장이 그러한 선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5) 이러한 논의는 J.M. Buchanan and R.E. Wagner(1977)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케인스이론은 위정자들의 과잉지출을 통한 자기이해 충족과정에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과를 낳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록 자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실패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개입에 의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완전경쟁모형은 경제주체의 (초기의) 부와 능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상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것이 반드시 분배면에서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초기부존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수많은 파레토효율상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상태가 분배면에서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주의자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배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에 바탕을 두고, 시장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나 시장이 수행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비시장적 방법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상태로 시정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⁶⁾ 이들이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비시장적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가격기구와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조세를 통해 국가기관이 공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편익에 보다 더 잘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들의 견해는 이론적으로는 흔히 추가소득의 한계효용이 모든 개인에게서 동등할 때 후생수준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⁷⁾ 이러한 명제에 바탕을 두고 개혁주의자들은 분배문제의 해결에서도 사용자부담을 확장하거나 부자들에 의한 사적시설활용을 촉진하기보다는 피구식 해결책, 즉 조세-이전지출수단에 의한 능동적 ·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6) 이 후자의 예로 머스그레이브의 '가치재'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7) W.J. Smuels(1994), p.373.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의 한계효용이 측정가능하고 비교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득재분배로 인한 유인감소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나타난 케인즈와 그를 따르는 케인즈주의자는 유효 수요이론에 바탕을 두고, 총수요관리를 위해 적자재정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적자재정정책에 대한 긍정적 관념에 바탕을 두고 불황 또는 대량실업이나 지나친 호황 등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한 나라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갭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불황기에는 적자재정을, 호황기는 흑자재정을 정책적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펴 오고 있다.

이러한 적자재정사상은 처음에는 단기적인 수요조정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차츰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총수요조정 차원으로 옮겨 왔다. 나아가서 오늘날 개혁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재정수지를 국민경제의 '안정화요소'로 삼아 총수요를 조정하여 경기변동을 평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완전고용 내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수준을 달성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논자도 있다. 이들은 예산상의 (불)균형상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요를 적절히 조절(미조정)함으로써 경기조절을 통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거나 적어도 바람직한 상태로 타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8)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의 재정의 경제적 기능문제는 마르크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그러나 다루려고 했던 바로 '국가에 의한 부르주아 사회의 총괄'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마르크스에 의한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총괄'은 먼저 자본가계급에 의한 계급지배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권력적 총괄' 기능과 자본축적을 보완·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경제적 총괄'기능으로 나뉜다. 이렇게 볼 때, 정치경제학에서 다루는 재정론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권력적 총괄'과 '경제적 총괄' 기능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8) K. Marder(1994), pp. 18~19.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 제도주의자는 재화의 유형은 재화 자체가 갖는 고유한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도론자는 기업의 수익성 등이 그 사회의 제도적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정책을 통해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제도론자들은 자원배분과 관련해 공공부문(재정)의 최적역할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전술한 가치기준을 충족시켜 질적인 생활과정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자원배분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은 민간의 자원배분과 사회의 (진화하는)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 끊임없이 조정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사회적(최적)가치에 일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재분배기능에 있어서는 '베블렌의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진화과정의 새로운 사회질서 형성에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기나 과소비에 제공되는 부에 역유인을 주며, 제작정신 본능에 유인을 줌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론자의 분배관은 한 사회에서 취약한 개인들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논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제도학파의 고유한 윤리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안정성장기능에 있어서 제도학파는 국가의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생활과정을 담당하는 제 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안정국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정화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은 그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도론자는 여전히 안정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득세법에 누진성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적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장치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잠재적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사비를 줄이고 사회의 경제적 하부구조와 교육, 주택, 공공보건 등의 분야에 높은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안정과 더불어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소득정책을 통한 경기대응조치의 필요성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경제적 이익집단을 포괄하는 동의획득과정(*concensus-building process*)이라는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또한 제도론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

9) 우명동,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해남, 1999, pp. 157~158, 163~164, 169~176, 489~490, 681~685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세계적으로 비교적 호황기였던 70년대 이전에는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경기변동에 뚜렷한 관심이 없었으나 1,2차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자 경기변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거시경제적 환경변화에 큰 자극을 받아서 경기변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우리경제를 대상으로 경기변동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경기변동 관련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모형의 타당성과 경기변동 이론에서 통상적으로 정형화된 사실들을 우리경제에 적용시켜 보는 것인데,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국가간에 경기변동의 유사성과 상호관련성 문제, 통화의 내생성 문제, 충격의 원인과 영향의 상대적 크기, 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EC(European Commission)의 'QUEST', OECD의 'Interlink', NIESR(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NIGEM'등 거시경제이론에 기초한 대형 계량경제구조모형(Structural econometric models)을 통한 simulation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 부류로 회귀분석, 내지는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등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 결과이다. 전자는 구조모형이기에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가정(가격신축성, 기대형성에 대한 가정 등)에 따라 재정정책 변수의 효과에 대해 미리 제약을 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재정지출 승수, 조세 승수의 크기에 미리 이론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time-series 분석으로서 각 변수의 효과에 대해 제약을 주지는 않으나 분석 결과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구조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경기조절효과가 조세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구조모형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지출이 임시적으로 모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으며, 조세가 상대가격, 소득분배, 근로 및 투자유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모형을 통해 각국에서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얼마나 경기안정에 기여했는가를 분석한 결과(Van den Noord, 2000)를 살펴보면, 자동안정화장치가 재량정책보다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구조모형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유효성 결과

국가	실제의 산출격차 표준편차	산출격차, 표준편차의 증가(+)또는 감소(-)	
		자동안정화장치에 기인한 증감	재량정책에 기인한 증가
핀란드	5.7	-7.8	-2.9
아일랜드	3.6	-0.4	-0.7
스웨덴	2.9	-1.0	-1.1
이탈리아	2.3	-0.7	1.7
스페인	1.9	-0.4	-1.1
벨기에	1.8	-0.5	0.7
프랑스	1.8	-0.3	0.1
그리스	1.8	-0.3	-2.6
영국	1.6	-0.7	-0.4
독일	1.4	-0.8	-0.3
오스트리아	1.3	-0.1	-1.4
네덜란드	1.1	-0.4	-1.5
평균	2.3	-1.1	-0.8

주: 경기변동은 산출격차(output gap)의 표준편차로 측정.

자료: Van den Noord (2000)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2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산출격차(output gap)의 표준편차는 1991~99년 기간 중 2.3%이었는데, 자동안정화장치는 표준편차를 1.1%p 줄이는 데 기여하였고 재량정책은 0.8%p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는 재량정책이 종종 오히려 경기진폭을 늘렸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자동안정화장치보다 재량정책이 경기진폭을 줄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재량정책을 활용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경우 재량정책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의 대표적 예로는 Blanchard and Perotti(2002), Fatas and Mihov(2000)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연구에서는 3개 변수(산출, 조세수입, 재정지출)에 관한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Structural VAR모형을 추정하였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5개 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팽창적 재정정책은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추정된 승수의 값은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조모형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재정승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재정지출승수와 조세승수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참조)

<표 2> SVAR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승수 추정결과

연구자	국가	표본기간	지출승수		세입승수	
			초기	최대	초기	최대
Blanchar and Perotti(2002)	미국	1960~1997	0.8	1.3	0.7	0.8
Fatas and Mihov(2000)	미국,	1960~2000	0.4	1.1	0.3	0.8
	영국	1960~2000	0.3	0.3	-0.04	0.2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채권연구원, 2004.

재정정책의 실물경제 효과를 소득 중심으로 분석한 국내의 김성순(2001), 이인실 · 김기승(2004), 최종수(2002) 등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조세의 증가는 소득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모수원 · 봉우종(1996), 박종구(1995), 조하현(1996) 등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 대체로 양(+)의 반응 혹은 무반응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⁰⁾

10) 재정경제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채권연구원, 2004.

<표 3> SVAR모형을 사용한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국내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김성순 (2001)	Ahmed & Rogers(1995)의 현재가치계약 접근법에서 도출된 말기조건식을 추정 방정식으로 이용	· 소득에 정부지출은 양(+), 조세는 음(-)의 영향 · 투자성 지출이 소비성 지출보다 더 큰 양(+) 의 효과를,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큰 음(-)의 효과
김성순 (2003)	더미변수를 포함한 단기SVAR모형을 이용 (식별방법:Cholesky Decomposition)	·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전후에 상이하여 위기 이전에는 음(-), 이후에는 양(+) · 소비성 지출은 소득에 음(-), 소비에는 위기 이전에는 음(-)에서 이후에는 양(+) 의 영향 · 투자성 지출은 소득에 위기 이전에는 음(-) 이후에는 양(+), 소비에는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음(-)
모수원 봉우종 (1996)	Modigliani & Sterling(1986) 모형에 근거하여 공적분기법과 Geweke & Porter-Hudak(1987)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	·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약
박종구 (1995)	Feldstein(1982), Kormen(1983)의 방법 및 VAR 모형을 이용	·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양(+) 의 영향
박하섭 최중수 (1997)	VAR 모형을 이용	· 재정적자 및 국채의 충격이 소비, 이자율, 환율 및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미미하며, 정부지출의 경우도 유사
이인실 김기승 (2004)	케인즈 단순모형 하에 승수를 도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	· 경기부양에는 정부지출 정책이, 실업률을 줄이는데는 감세(소득세 인하)정책이 적절
조하현 (1996)	Aschauer(1985)의 동태적 최적화 모형에서의 오일러 방정식에 유효소비개념과 합리적 기대를 적용한 교차방정식 제약을 유도하여 완전정보 최우추정법(FIML)을 이용	· 리카도 불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와 합리적 기대의 결합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조하현 박광우 (1997)	영구소득-소비 모형과 Kalman Filter를 사용한 Time-Varying Parameter모형을 이용	· 정부의 적자 재정정책 및 공채발행이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중수 (2002)	자산수요함수와 VAR 모형 하에서 인과관계 분석을 이용	· 국공채조달에 대한 실질 소득, 명목 소득 및 GDP디플레이터의 변화가 미흡

자료: 김우철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4

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서로 다른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먼저 주요 선진국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Lane, 2003). 그러나 정부지출 가운데 특히 정부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경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Fiorito and Kollintzas(1994)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를 대상으로, 경기순환에 따른 여러 변수들의 정형화된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소비지출과 경제의 총생산과는 특별히 명확하게 유형화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Fiorito and Kollintzas(1994)는 기본적으로 소비 · 투자와 같은 여러 경제변수들이 보이는 평탄화된 추세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은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을 취하지만 정부소비의 경우는 국가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Talvi and Vegh (2000)의 연구는 56개 국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G7 국가의 경우에 산출과 정부소비에서 경기변동 부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정부소비지출과 관련되는데, Fiorito (1997)이 G-7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정지출 가운데 이전지출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경기대응적인 안정장치로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Lane(2003)은 산출물 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에 기초하여 정부지출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정부지출은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가운데 정부 소비부분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 가운데 경기역행적 형태를 보이는 부분은 주로 정부의 이전지출 및 이자지급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조세와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중에서 Huang and Lin (1993), 그리고 Strazicich(1997)와 같은 미국 대상 연구들은 경기변동상에서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세징수를 비교

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재정의 기조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arro (1979)의 조세평탄화가설 (the tax smoothing hypothesis)에 의하면, 적절한 조세 징수규칙은 세율을 시간에 걸쳐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즉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조세징수에 따른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시간에 걸쳐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즉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조세징수에 따른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시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경제의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율을 변화시켜 경기 순환에 대응하기 보다는 공채발행의 증감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Huang and Lim (1993)의 연구에서는 1929년에서 1988에 걸친 미국의 연간 재정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평탄화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조세평탄화 가설이 미국의 재정관련 자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Strazicich (1997)의 연구도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조세평탄화 가설이 실제 현실에서 부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재정수지가 경기순행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Fiorito, 1997; Sorensen, Wu, and Yosha, 2001) Sorensen, Wu, and Yosha, (2001)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부예산기조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보고하는데, 그 결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예산 흑자(적자)가 증가(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예산 흑자(적자)가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재정정책이 나타나고 경기가 호황인 경우는 수축적인 재정수지의 기조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기변동과 재정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재정정책은 대체로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대한 기

존 문헌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의 진폭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 건전성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집중되었다. (Gavin, Hausmann, Perotti, and Talvi, 1996; Gavin and Perotti, 1997; Stein, Talvi, and Gristani, 1998).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의식은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나타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수축적으로 사용되어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경기변동과 이러한 재정정책 기조와의 관계는 비단 중남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Talvi and Vegh, 2000). Talvi and Vegh, (2000)의 연구는 G7 국가의 경우에 정부지출과 총생산의 경기순환적 부분 사이에 상관관계가 '0'에 가깝지만, G-7 국가가 아닌 선진국의 경우에는 14개 국가 가운데 9개 국가에서 정부지출과 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연구에 포함된 36개 국가 모두에서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조절기능에 역행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수행되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축적 재정정책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경기조절기능에 역행하는 재정정책기조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genor, McDermott, and Prasad (1999)의 연구에서는 한국 · 칠레 · 멕시코 · 필리핀 등에서는 경기상승시기에 수축적인 정부지출정책이 수행되고 경기하강 시기에 확장적인 정부지출정책이 실시되어 경기대응적인 재정지출정책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다.¹¹⁾

11) 성태윤 · 이영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2005

<표 4> 회귀분석을 통한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연구요약

연구자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Fiorito and Kollintzas (1994)	주요 선진국인 G7국가를 대상으로, 경기순환에 따른 여러 변수들의 정형화된 유형을 살펴봄	· 정부의 소비지출과 경제의 총생산과는 특별히 명확하게 유형화된 관계를 보이지 않음.
Firito(1997) Sorensen, Wu, and Yosha, (2001)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부예산기조와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봄	·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예산 흑자(적자)가 증가(감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예산 흑자(적자)가 감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Huang and Lin (1993) Strazicich (1997)	미국을 대상으로 조세와 경기변동의 관계분석	· 경기변동상에서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조세징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재정 기조가 사용됨.
Lane (2003)	산출물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에 기초하여 정부지출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분석	· 정부지출은 대체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임 그러나 정부 지출 가운데 정부 소비부분은 경기순행적으로 움직임.
Talvi and Vegh (2000)	56개 국가의 표본을 대상으로 산출과 정부소비에서 경제변동 부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	· G7 국가의 경우에 산출과 정부소비에서 경기변동 부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임.
고영선(2001)	OECD, IMF의 구조적 재정수지 추정 방법 소개	· 변형된 OECD 방식에 따른 구조적 수지 추정
박형수(2002)	· OECD방식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지의 추정 · 경기변동과 재정수지 비교	· 구조적 재정수지를 추정하고 실제 재정수지를 구조적인 부분과 경기적인 부분으로 분리 · 재정수지의 GDP탄력성 계산을 통한 자동안정화 기능의 평가

이러한 선행연구에 유념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1994년에서 2003년 사이의 우리나라 및 OECD국가의 경기변동과 재정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한 실증 분석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994년에서 2003년 사이의 OECD 국가의 재정운영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모형을 설정해서 동기간의 OECD 국가의 경기대응성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OECD 국가의 재정운영과 재정수지 변화추세

먼저 우리나라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1년 정점에 달한 후 1988년까지 급격히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환 위기 직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8년에 23.8%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로는 22~24%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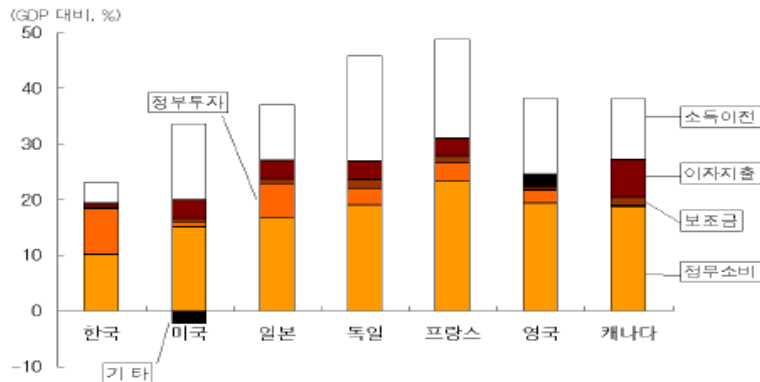


주: 2004~2005는 예산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호

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의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소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정부투자는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자지출이 제일 높게 나타난 나라는 캐나다였다.

<그림 2> 항목별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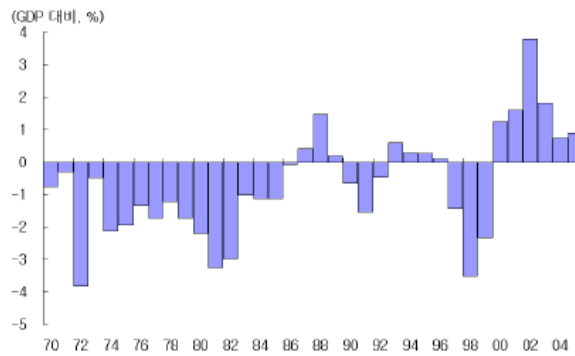


주: 2001년 기준. 한국 및 일본은 2000년 기준

자료: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Volume 2003/5 - March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표로 나타내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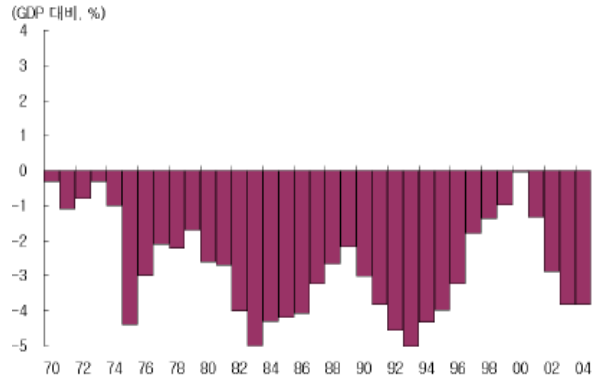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호.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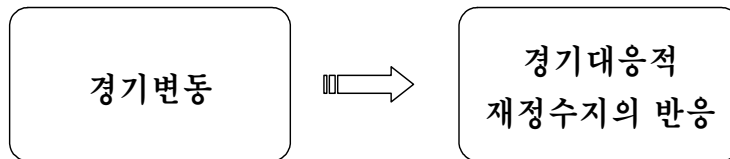
<그림 4> OECD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제 2 절 재정의 경기대응성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서술했던 재정의 경기대응성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해서 경기대응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우리나라 및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 실증분석한다.



1. 표본의 선정

정확한 표본기간은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최근 10년간에 대한 관찰치가 사용된다. 표본인 30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유럽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이다. 모든 변수의 출처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추출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연구 모형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델은 성태윤 · 이영의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2005)에서 사용한 모델이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여 경기를 조절하였는가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 추정식을 도출한다.

먼저,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세수입 · 재정지출, 그리고 GDP에 있어서 추세부분을 각각 제거하고 나머지 비추세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 관계는 각각의 비추세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ext{재정지수} - \text{재정지수의 추세}) = \alpha(\text{GDP} - \text{GDP의 추세})$$

여기에서 세수·세출·수지 등의 재정지수를 Z 로 표기하고 시간을 t 로 표기한다. 그리고 조세수입·재정지출·GDP에 있어서 추세부분이 t 의 2차식으로 근사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이러한 경기대응성 추정식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Solon, Barsky, and Parker (1994), Shin(2000) 등에서 경기 추세를 나타내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Z_t - (a_2 t^2 + a_1 t + a_0) = \alpha (\ln(GDP_t) - (b_2 t^2 + b_1 t + b_0)) \quad \text{(식 1)}$$

<표 5> (식 1)의 각 변수 설명

Z_t	시간에 따른 GDP대비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의 비율
$(a_2 t^2 + a_1 t + a_0)$	재정지수의 추세
$(b_2 t^2 + b_1 t + b_0)$	GDP의 추세
α	재정의 경기 탄력성

(식 1)을 Z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된다.

$$Z_t = \alpha(\ln GDP_t) - \alpha(b_2 - \frac{a_2}{\alpha})t^2 - \alpha(b_1 - \frac{a_1}{\alpha})t - \alpha(b_0 - \frac{a_0}{\alpha}) \quad (\text{식 2})$$

(식 2)를 시간에 대하여 1계 차분하면, t의 2차 항들은 소거되고 우리가 실제로 분석에서 사용할 회귀방정식인 (식 3)이 도출된다.

$$\Delta Z_t = \alpha \Delta \ln(GDP_t) + \beta t + \gamma + \varepsilon \quad (\text{식 3})$$

기본적으로 재정과 경기변동과의 실증분석은 재정수지의 경기탄력성을 추정하여 이루어진다. 즉 GDP 대비 재정지출 · 조세수입 · 재정수지 등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기초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GDP 대비 재정지출 · 조세수입 · 재정수지를 재정정책의 대응지표로 사용한 이유는 실제 GDP가 잠재 GDP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 경기변동이기 때문이다. 즉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 재정지출 · 조세수입 · 재정수지가 되며 설명변수는 경기변동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위의 회귀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정치는 α 값으로 재정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경기에 반응을 하였는지를 나타내 준다. 정부지출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는 음수가 나와야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여 경기변동을 줄이는 것이 되며, 조세수입 및 재정수지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는 양수로 측정되는 것이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변수의 기술통계

<표 6> 재정의 경기대응성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관찰지수	평균값	표준편차
GDP 성장률	300	3.149	2.4931
1차차분, 조세수입/GDP, %	300	-0.02	1.0617
1차차분, 정부지출/GDP, %	300	-0.01	0.7216
1차차분, 재정수지, %	300	0.004	2.4451
[년도-1994]	300	4	2.0

<표 6>에 따르면,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3.1%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수입과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조세수입/GDP, 정부지출/GDP의 1차 차분에 대한 평균값은 -0.02와 -0.01로 나타낸다. GDP에 대한 재정수지 비율은 평균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 재정수지/GDP의 1차 차분에 대한 평균값은 양수로 나타난다.

4. 분석 결과

회귀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7>은 1차차분 재정수지와 변수 간 상관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표 7> 1차차분 재정수지와 변수간 상관분석

	1차차분 재정수지	$\ln(\text{GDP}_t) - \ln(\text{GDP}_{t-1})$	$\ln(\text{GDP}_{t-1}) - \ln(\text{GDP}_{t-2})$	$\ln(\text{GDP}_{t-2}) - \ln(\text{GDP}_{t-3})$	[연도-1994]	VIF
1차차분 재정수지	1.00					
$\ln(\text{GDP}_t) - \ln(\text{GDP}_{t-1})$	0.30***	1.00				1.28
$\ln(\text{GDP}_{t-1}) - \ln(\text{GDP}_{t-2})$	0.11	0.30***	1.00			1.24
$\ln(\text{GDP}_{t-2}) - \ln(\text{GDP}_{t-3})$	-0.11	0.24***	0.26***	1.00		1.07
[연도-1994]	-0.39***	-0.28***	-0.20***	-0.08	1.00	1.30
Durbin-Watson D 1.765 *** 1%유의수준 ** 5%유의수준 * 10%유의수준						

<표 7>는 1차차분한 재정수지와 설명변수간 상관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1차차분 재정수지와 설명변수인 $\Delta \ln(\text{GDP}_t)$ 의 상관계수는 0.30 등으로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당시기의 $\ln \text{GDP}$ 변화량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ln \text{GDP}$ 변화량의 상관계수도 0.11 등으로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VIF 값을 비교해 볼 때에도 각각 1.28, 1.24, 1.07 등으로 각 변수들간의 다중 공선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형내의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알려주는 더빈-왓슨 값도 1.765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8> 1차차분 조세수입과 변수간 상관분석

	1차차분 조세수입	$\ln(\text{GDP}_t) - \ln(\text{GDP}_{t-1})$	$\ln(\text{GDP}_{t-1}) - \ln(\text{GDP}_{t-2})$	$\ln(\text{GDP}_{t-2}) - \ln(\text{GDP}_{t-3})$	[연도-1994]	VIF
1차차분 조세수입	1.00					
$\ln(\text{GDP}_t) - \ln(\text{GDP}_{t-1})$	0.08	1.00				1.28
$\ln(\text{GDP}_{t-1}) - \ln(\text{GDP}_{t-2})$	0.10	0.30 ***	1.00			1.25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9	0.24 ***	0.26 ***	1.00		1.08
[연도-1994]	-0.23	-0.28 ***	-0.20 ***	-0.08	1.00	1.28
Durbin-Watson D 1.748 *** 1%유의수준 **5%유의수준 *10%유의수준						

<표 8>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1차차분 조세수입과 설명변수인 $\Delta \ln(\text{GDP}_t)$ 의 상관계수는 0.08 등으로 상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시기의 $\ln \text{GDP}$ 변화량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ln \text{GDP}$ 변화량의 상관계수도 0.30 등으로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F값을 비교해 볼 때에도 각각 1.28, 1.25, 1.08 등으로 각 변수들간의 다중 공선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형내의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알려주는 더빈-왓슨 값도 1.748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9> 1차차분 정부지출과 변수간 상관분석

	1차차분 정부지출	$\ln(\text{GDP}_t) - \ln(\text{GDP}_{t-1})$	$\ln(\text{GDP}_{t-1}) - \ln(\text{GDP}_{t-2})$	$\ln(\text{GDP}_{t-2}) - \ln(\text{GDP}_{t-3})$	[연도-1994]	VIF
1차차분 정부지출	1.00					
$\ln(\text{GDP}_t) - \ln(\text{GDP}_{t-1})$	-0.16	1.00				1.21
$\ln(\text{GDP}_{t-1}) - \ln(\text{GDP}_{t-2})$	-0.41***	0.30***	1.00			1.19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6	0.24***	0.26***	1.00		1.12
[연도-1994]	0.29***	-0.28***	-0.20	-0.08	1.00	1.10
Durbin-Watson D 1.853*** 1%유의수준 **5%유의수준 *10%유의수준						

<표 9>은 1차차분한 정부지출과 설명변수간 상관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표 9>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1차차분 정부지출과 설명변수인 $\Delta \ln(\text{GDP}_t)$ 의 상관계수는 -0.16 등으로 상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시기의 $\ln \text{GDP}$ 변화량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ln \text{GDP}$ 변화량의 상관계수도 -0.41, -0.06 등으로 상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IF 값을 비교해 볼 때에도 각각 1.21, 1.19, 1.12 등으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모형내의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더빈-왓슨 값도 1.853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10-1> 재정수지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07	0.004
(1)ln(GDP _t)-ln(GDP _{t-1})	0.182 ^{***}	0.055
(2)ln(GDP _{t-1})-ln(GDP _{t-2})	-0.028	0.055
(3)ln(GDP _{t-2})-ln(GDP _{t-3})	-0.074	0.047
[연도-1994]	-0.002 ^{***}	0.00007
R-Square 0.2575		

제 (1)열은 t기에 해당하는 GDP 차분만을 포함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제 (1)열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대하여 재정수지/GDP의 계수값은 0.182로 양의 값을 가지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2)열과 (3)열은 해당 t시점에 대한 GDP차분 뿐만 아니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GDP 차분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경기대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가 10% 상승한 경우 GDP대비 재정수지가 2%p후자를 보이는 정도의 반응을 나타낸다.

<표 10-2> 재정수지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10	0.006
(1) $\ln(\text{GDP}_t) - \ln(\text{GDP}_{t-1})$	0.179^{***}	0.056
(2) $\ln(\text{GDP}_{t-1}) - \ln(\text{GDP}_{t-2})$	-0.028	0.057
(3)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76	0.047
[연도-1994]	-0.0017	0.0013
Country dummy	-0.0013	0.00162
year dummy	-0.0008	0.004
R-Square 0.2630		

<표 10-2>는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한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10-2>에 따르면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계수의 값이 **0.179**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경기변동에 경기대응하는 형태를 보인다..

<표 11-1> 재정수입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04	0.004
(1) $\ln(\text{GDP}_t) - \ln(\text{GDP}_{t-1})$	0.060	0.0522
(2) $\ln(\text{GDP}_{t-1}) - \ln(\text{GDP}_{t-2})$	0.014	0.0533
(3)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471	0.0451
[연도-1994]	0.0011*	0.0006
R-Square 0.0798		

재정의 경기대응성 분석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재정지출, 재정수입, 및 재정수지)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는가를 추정하여 이루어진다. <표 11-1>은 조세수입/GDP가 얼마나 경기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11-1>의 제 (1)열은 t기에 해당하는 GDP 차분만을 포함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제 (1)열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대하여 조세수입/GDP의 계수는 유의성을 상실하여 조세수입은 경기변동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열과 (3)열은 해당 t시점에 대한 GDP 차분뿐만 아니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GDP 차분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세수는 경기변동에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재정수입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11*	0.006
(1) $\ln(\text{GDP}_t) - \ln(\text{GDP}_{t-1})$	0.055	0.053
(2) $\ln(\text{GDP}_{t-1}) - \ln(\text{GDP}_{t-2})$	0.020	0.054
(3)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48	0.044
[연도-1994]	0.0002	0.0011
Country dummy	-0.002	0.001
year dummy	-0.003	0.003
R-Square 0.108		

<표 11-2>는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한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11-2>에 따르면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도 역시 추정계수의 값이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세입이 경기변동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1> 재정지출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009	0.00106
(1)ln(GDP _t)-ln(GDP _{t-1})	-0.005	0.0146
(2)ln(GDP _{t-1})-ln(GDP _{t-2})	-0.0843***	0.0145
(3)ln(GDP _{t-2})-ln(GDP _{t-3})	0.0152	0.0137
[연도-1994]	0.0005***	0.0001
R-Square 0.2289		

정부지출이 경기역행적으로 반응하였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2-1>에 나타나 있다. <표 12-1>의 제 (1)열은 t기에 해당하는 GDP 차분만을 포함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제 (1)열에 의하면 경기변동에 대하여 정부지출/GDP의 추정치는 -0.005로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경기에 대한 인식 정책결정, 정책시행, 정책시행의 효과에 대한 시차가 존재할 것임을 고려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2)열과 (3)열은 해당 t시점에 대한 GDP차분뿐만 아니라, 1년 전기 및 2년 전기의 GDP차분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1년 전기의 정부지출차분 계수의 값은 -0.084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경기변동에 1년정도의 시차부터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지출은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 지출이 증가하는 경기 진폭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경기대응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재정지출의 경기에 대한 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intercept	0.0001	0.001
(1) $\ln(\text{GDP}_t) - \ln(\text{GDP}_{t-1})$	-0.004	0.014
(2) $\ln(\text{GDP}_{t-1}) - \ln(\text{GDP}_{t-2})$	-0.083 ^{***}	0.014
(3) $\ln(\text{GDP}_{t-2}) - \ln(\text{GDP}_{t-3})$	0.015	0.013
[연도-1994]	0.0007 ^{***}	0.0003
Country dummy	-0.0002	0.0004
year dummy	-0.0009	0.001
R-Square 0.2289		

<표 12-2>는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한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12-2>에 따르면 국가 및 연도 더미변수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계수의 값이 -0.083으로 1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더미 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했을 경우에도 정부지출은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 지출이 증가하는 경기 진폭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경기대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론

정부의 재정운영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외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재정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조세·재정제도 자체에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정이 어느 정도 경기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직·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상황 또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경제가 불황이면 정부는 세율 인하, 조세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거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물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을 '재량적 조세·재정정책'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및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최근 10년간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는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추출한 자료로 실증 분석하였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나타내는 재정의 경기대응지표는 GDP대비 재정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는 $\ln GDP$ 를 사용하였다.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재정정책의 변화분 가운데 재량적인 부분과 자동안정장치에 대한 경기변동을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조적 재정수지나 재정충격지표 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지출, 재정수입, 재정수지

등이 경기변동에 대한 변화분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우리나라 및 OECD국가 표본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수지 항목별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정계수의 값이 양수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회귀분석 결과 추정계수의 값이 양수로 나타나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있어서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할 경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재정수지의 추정치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경기변동에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추정계수의 값이 양수로 나타나 경기변동에 조세수입이 경기대응적으로 대응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의 경우 추정치의 값이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에 대해서 조세수입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할 경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조세수입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지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추정치의 값이 음의 계수가 나타나야 경기대응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매우 유의한 음의 계수가 나타나서 경기변동에 정부지출은 강한 경기대응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더미변수 및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관찰되지 못한 국가별/연도별 특성들을 통제할 경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정부지출은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OECD국가 그룹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재정의 대응방식이 정부지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하였으므로 실제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

인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적인 실증연구이므로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각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결과에 대한 미시적인 원인분석이나 면밀한 규범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0개국의 자료로 분석한 평균적인 결과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특정적인 연구가 행해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영선, “재정적자가 저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연구 제22권 제1.2호: 193-284. 2000
- 김성순, “재정적자의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 재정논집 제15권 제2호:3-31. 2001
- 박종규,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원정책보고서 98-05, 한국조세연구원. 1998
- 박형수,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로 본 우리나라 재정정책”
재정포럼 10월호, 2002
- 우명동,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해남, 1999
- 이진원, “한국경제의 실물적 경기변동 및 수요중심적 경기변동”1997
- 성태윤 · 이영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경기안정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 19집 제 2호. 2005
-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 1996
- 최성수, “재정학”, 대왕사 1997
- 재정경제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04
“한국통합재정수지”각호.

<외국문헌>

Agenor, Pierre-Richard, C. John McDermott, and Eswar S.

Prasad. (1999),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Some Stylized Facts,"

IMF Working Paper 99/35.

Barro, Robert J. (1979),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940-971.

Buchanan, J.M. and R.E. Wagner, *Democracy in Deficit*, 1977

(이필우 역, 『케인즈적 사고의 유산』, 건대출판부, 1981)

Fiorito, Riccardo. (1997),

"Stylized Facts of Government Finance in the G-7,"

IMF Working Paper 97/142.

Fiorito, Riccardo and Tryphon Kollintzas. (1994),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in the G7 from a Real
Business Cycles Perspective,"

European Economic Review 38: 235-269.

Gavin, Michael, Ricardo Haumann, Roberto Perotti, and Ernesto Talvi.(1996).

"Managing Fiscal Poli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Volatility, Procyclicality, and Limited
Creditworthines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326.

Gavin, Michael and Roberto Perotti. (1997).

"Fiscal Policy in Latin America."

NBER Macroeconomics Annual 12: 11-71.

Huang, Chao-Hsi and Kenneth S. Lin. (1993),

"Deficits,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ax
Smoothing in the United States:1929-1988,"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1:317-339.

Lane, Philip R. (2003).

"The Cyclical Behavior of Fiscal Policy: Evidence from
the OEC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2661-2675.

Samuels, W.J. "Edwin E. Witte's Concept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Land Economics*, 43,1967

Sorenson, Bent E., Lisa Wu, and Oved Yosha. (2001).

"Output Fluctuations and Fiscal Policy: U.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1978-1994,"

European Economic Review 45: 1271-1310.

Stein, Ernesto, Ernesto Talvi, and Alejandro Grisanti. (1998).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Fiscal Performance: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367.

Strazicich, Mark. (1997).

"Does Tax Smoothing Differ by the Level of
Government? Time Series Evidence from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9: 305-326.

Talvi, Ernesto and Carlos Vegh. (2000).

"Tax Base Variability and Procyclical Fiscal Policy," *NBER*

Working Paper 7499.

Van den Noord, Paul. (2000).

"The Size and Role of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in the
1990s and Beyo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2000-3.

<기타문헌>

삼성경제연구소

재정경제부

통계청

OECD

World Development Indicator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business cycle correspondency of fiscal policy.

Jeon, Beo Deul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aper empirically studies on the business cycle correspondency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from the 1994 ~ 2003 year. Fiscal business cycle indicator which means government fiscal policy is using tax revenue/ \ln GDP, government expenditure/ \ln GDP, Balances/ \ln GDP.

And exogenous variable which means business fluctuations is \ln GDP. The model which is used to regression analysis is fixed effect model and the data which is used in analysis extracted from world bank indicator of World Bank.

Using business cycle, we find that fiscal policy responds significantly counter-cyclically in **OECD**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business cycle correspondency becomes accomplished from the **OECD** countries sample.